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16면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2면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15면

독자편지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 /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12~13면

치솟는 물가에
생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

3면

서방과 러시아의 동유럽 쟁탈전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본질이다

관련 기사 4, 5, 6, 7, 8, 9, 10, 11면

2월 22일 새벽(한국 시각) 현재,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방에 병력 투입 명령을 내렸다. 현지의 친러 무장 집단들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한다는 행정명령을 푸틴이 발표한 직후의 일이다.

현재로서는 푸틴의 의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겠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랬다가는 서방과 본격적으로 충돌하게 될 텐데, 러시아는 냉전기 옛 소련처럼 미국과 본격적으로 힘을 겨룰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응도 매우 신중하다. 22일 아침(한국 시각) 백악관은 푸틴을 규탄하고 제재를 경고하면서도 “러시아군이 돈바스로 이동하는 것 자체는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우려 조장에 열심이었으면서 말이다.

이는 미국이 당장 러시아를 상대로 직접 맞붙기는 여의치 않은 것의 반영이다. 미국은 러시아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경쟁자인 중국에도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첨예한 상황이 강대국들의 의도대로 순순히 관리되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어느 한 쪽의 사소한 계산 착오도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의 정확한 병력 투입 시점과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병력 투입 명령 자체가 하나의 시위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병력이 투입되면 이 지역 전체의 위험이 더한층 고조될 것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첫 총탄을 누가 쏘느냐가 아니라, 이런 첨예한 조건이 조성된 데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다.

그간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두고 치킨 게임을 벌여 왔다.(8~10면을 보시오.)

미국은 푸틴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푸틴을 약하게 보이게 하려고 푸틴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푸틴의 침공을 부추기게 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동유럽 지배권 쟁탈전에서 서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게임의 판돈을 올린 것이다.

언론은 푸틴이 민스크 협정(우크라이나 정부와 분리주의 무장 집단 사이의 정전 협정)을 대놓고 무시했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유명무실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은 몇 년째 저강도 전쟁을 벌여 왔다(푸틴이 배후에서 그 전쟁에 개입했다). 그 전쟁으로 최근까지 최소 1만 5000명이 사망했다.

적어도 2월 16일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과 이미 포격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것이 강대국들 간 첨예한 긴장 속에 삼시간에 초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러시아의 “평화 유지” 운운이 명분일 뿐임은 누구나 안다. 러시아가 실제로 개입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은 돈바스 지방(과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미 지난주부터 적잖은 돈바스 거주 민간인들이 국경을 넘어 피신했는데, 충돌이 격화돼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였다.

러시아의 개입도, 서방의 맞대응도 위험만 키울 것이다.



오미크론 폭증

정부 방역 정책은 재택 방치와 각자도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입원환자와 중환자, 사망자 수도 차츰 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이면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방역은 거꾸로 완화하고 있다. 이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고 백신 접종 덕분에 더 안전해졌다는 게 이유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보고, 감염을 방치해 면역력을 획득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다.

“예방접종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명률이 0.13~0.14퍼센트 정도 ... 보통 계절독감의 치명률이 0.1퍼센트라고 할 때 이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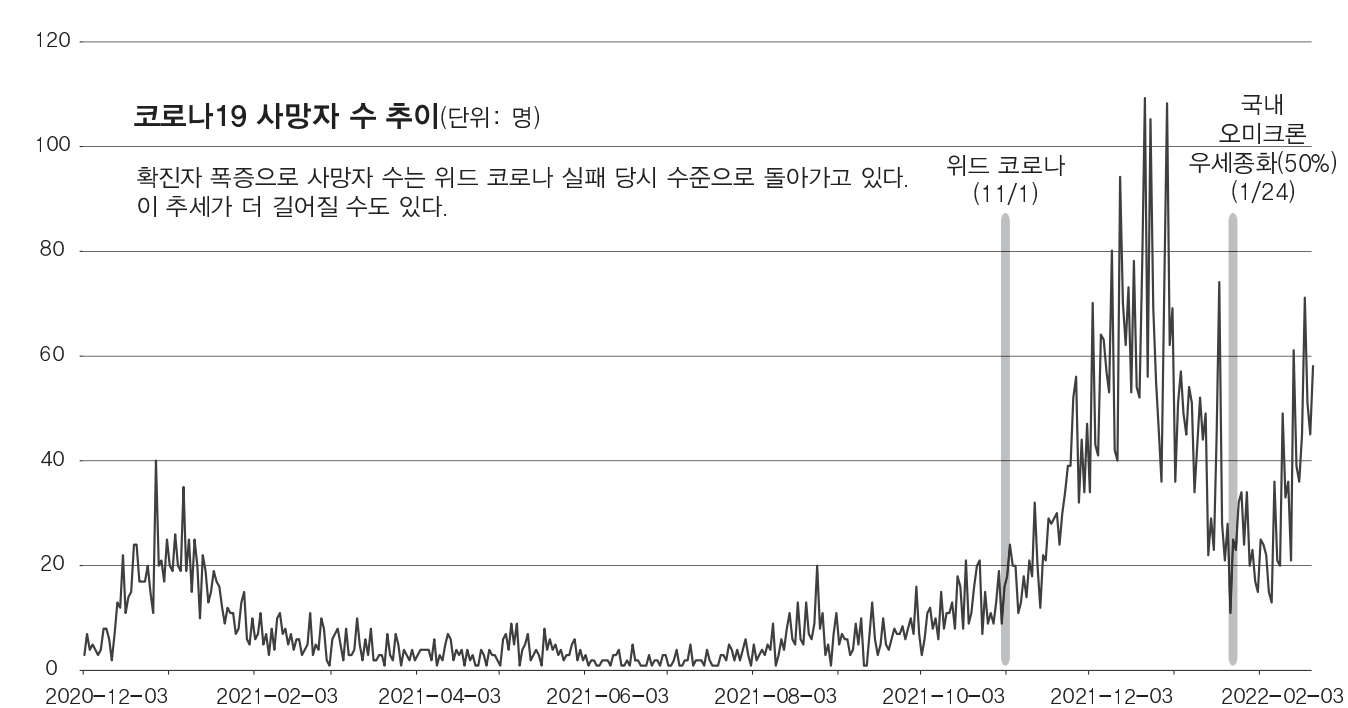
“한 차례 정도 큰 유행을 거치면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치명률이 높은) 델타보다는 오미크론이 유행하는 상황이 더 유리하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실제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앞둔 시점에 방역을 완화하고, 검사를 유료화하는 등 사실상 감염 확산을 방치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매일 확진자 수 등을 발표하는 등 방역 체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 주려 애썼다. 신속항원검사의 민감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확한 통계도 발표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먼저,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져도 감염자가 늘어나면 사망자와 중환자가 늘어난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데도 이미 하루 사망자 수는 델타 변이 확산이 한창이던 1월 초와 비슷해졌다. 11월에 시작한 ‘위드 코로나’ 실패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2월 말~3월 초를 정점으로 확산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감염병 유행이 한창인 상황에서 치명률을 속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아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전에 감염됐던 사람들과 똑같은 비율로 완쾌되거나 사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진행 과정도 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예컨대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산된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12월에 이미 정점을 찍었지만, 사망자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병의 경과가 길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일부 의료진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폐렴이 심하지 않지만, 다른 장기의 혈관을 파괴해 오랫동안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다. 델타 변이는 입원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평균 3주가량 걸리는 반면, 오미크론은 8~10주나 걸린다는 것이다. 비록 당장은 치명률이 낮아 보여도 전체 기간을 누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여유를 부리지만 어느 순간 중환자 수가 예상보다 많아지면 의료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본 것처럼 말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역당국이 사실상 감염 확산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미 50만 명가량이 ‘재택치료’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다. 얼마 전 확진 판정을 받은 복지부 차관도 병원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정도

이니, 평범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체 확진자의 90퍼센트를 집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임신부가 출산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고, 7개월된 영아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 머무르다가 사망하는 사례도 나왔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50대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가 감염 확산이 ‘유리하다’고 하는 판이니 기업주들은 사업장에 확진자가 생겨도 검사와 격리를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방역 완화로 인한 부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는 백신패스 의무화 조처를 정부가 여전히 철회하지 않는 것도 방역 책임과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신뢰하기도 어려운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두 개에 만 원이 넘는 키트를 구입하거나 병원에 가서 진찰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만 원을 추가로 써야 하는 것이다.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도 일자리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킨 추경은 기업주들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팬데믹으로 소득이 줄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아예 관심 밖이다.

보여 주기에만 급급한 방역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응급환자 관리를 담당하던 경기 용인시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져 의식을 잃기도 했다. 입원환자도 빠르게 늘고 중환자도 늘어나면서 병원 노동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단지 오미크론 변이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이 도박에서 문재인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재정 지출을 줄이고 기업 이윤 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 금리 인상과 유가 인상, 인플레이션 속에서 한국 정부는 재정 지출 감축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경제부총리 홍남기가 ‘여야가 합의해도 안 한다’ 하며 추경 규모 확대에 격렬히 반대한 이유다.

정부의 인식이 이렇다 보니 수만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하루 검사 비용만 수십억 원씩 지출해야 하는 PCR 검사 등을 유지하는 것이 낭비라고 여기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앞서서 이 정신 나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 문재인 정부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다.

장호중

치솟는 물가에 생계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

정선영

올해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6퍼센트 올랐다. 10년 만에 4개월 연속 3퍼센트대 상승한 것이다.

이런 수치도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부담을 제대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4퍼센트가 넘게 올랐다. 채소, 고기 등 신선식품지수는 6퍼센트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키우는 장미순 씨는 이렇게 말했다.

“식비가 엄청 올라서 다른 지출을 많이 줄여야 돼요. 채소값이 올라서 예전에는 김치도 직접 담가 먹고 했는데 그런 걸 많이 줄이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니까 여성들이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 결국 값싼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먹이게 돼요.

“우리 아이 영어 학원비는 월 5만 원 정도 올랐어요. 공과금에 건강보험료도 오르니 삶이 너무 팍팍해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오동환 씨도 오르지는 물가를 체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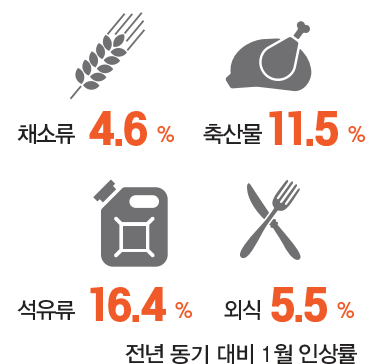
“200밀리미터 우유는 900원대에서 1000원으로 올랐고요, 소주는 1800원에서 곧 1950원으로 올라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격표를 교체하는데, 최근 몇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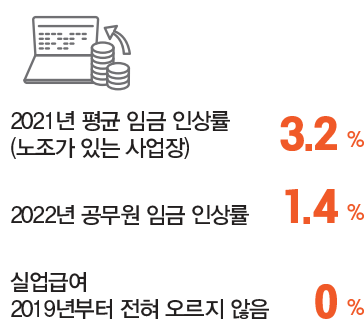
2월 21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주유소

김민오 기자

생활물가는 오르고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간은 두 번, 세 번 인상되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야금야금 올리는 거죠.”

이번 물가 상승에는 유가 상승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16퍼센트 넘게 올랐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로 유가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은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박점환 씨는 이렇게 말했다.

“경유가 1400원대에서 최근에 1500원대 중반으로 올랐어요. 기름값이 한 달에 한 300만 원 들었는데, 유가가 10퍼센트만 올라도 30만 원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화물차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임금 올리고 공공요금 인상 중단하라

노동자 등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생필품 가격 인상을 규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많은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데서 보듯 진정으로 필요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는 앞장서서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7퍼센트 올랐다. 인상률이 그 전 5년에 비해 두 배로 오른 것이다. 고용보험료율도 1.4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임기 동안 두 차례나

올랐다.

이것도 모자라 올해 4월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10.6퍼센트, 16.2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은 1.4퍼센트 인상에 그쳤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라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다.

최저임금도 고작 5퍼센트 올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률도 겨우 생활물가 인상 수준에 그친다.

은행 콜센터 노동자인 박한솔 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격일로 근무하는데 기본급이 지난해에 127만 원에서 올해 132만 원으로 5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최저임

금 인상으로 기본급이 오르니까 사측이 수당을 깎는 식으로 해서 인상 폭을 줄였어요. 식비, 배달료, 채소값도 다 올랐는데 5만 원 인상으로는 임금 인상이라 할 수가 없어요.”

고용부가 지난해 12월 사업체노동력을 조사한 것을 보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연속 0퍼센트대로 정체하고 있다. 공식 통계보다 체감 물가 상승률이 더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자 임금은 삭감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가 상승으로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올해 겨우 7500원 올랐다. 지난해 물가 인상을 2.5퍼센트를 반영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물가 인상을 따라잡기에는 턱없이

지난해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이에 따라 유가 보조금은 줄었다. 유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전혀 못 본 것이다.

“화물 운송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운송 단가는 떨어졌고, 저만 해도 요즘 소득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회사에서 장거리 운송을 주고 해서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300만 원대는 됐는데, 지금은 단거리 운송만 주고 있어서 버는 돈이 2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경기도에서 트럭 운전을 하는 최혁열 씨는 자신들이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돼 있다고 했다.

“최근에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저희는 영업 제한을 안 한 다며 지원금도 안 줘요. 경기가 안 좋고 저희도 소득이 감소했는데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돼 있어요.”

최근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곳곳에서 공급 차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초기에 위축된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공급 차질이 심해졌다.

석유수출국기구 오pec이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고 고유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줄어든 이윤을 보상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기업들은 상품 가격을 올려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부족하다.

게다가 실업급여는 2019년 이후 하루 최저 6만 120원, 최대 6만 6000원으로 동결된 상태. 실업자들의 생활수준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석유 가격 상승으로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사들은 지난해 7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수출 대기업들도 막대한 이익을 거둬 500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200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가돼선 안 된다. 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생필품 가격 인상을 규제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철회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입장

이 성명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이 2월 16일에 발표한 것이다. 국제사회주의경향에는 서방과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포함돼 있고, 한국에서는 노동자연대가 속해 있다

1. 우크라이나 위기로 유럽에 끔찍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블록(미국과 그의 유럽 동맹국들)과 그보다는 약하지만 잔인하기는 매한가지인 또 다른 제국주의 세력(러시아)이 충돌하는 것이다. 양측 모두에게 우크라이나는 장기판의 말일 뿐이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는 어긋난다. 이번 위기에 연루된 나라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2. 이번 위기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병력을 집결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푸틴은 이런 위협적 행보를 정당화하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유대라는 대러시아 국수주의적 환상을 들먹이는 동시에, 미국이 나토(NATO)와 유럽연합의 동쪽 확장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한 오랜 불만을 다시금 표출했다. 특히,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과 나토 병력을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해 왔다.

3. [미국의]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정부가 나토와 유럽연합이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과거 스탈린주의 진영에 속했던 국가들을 받아들이며 확장하도록 주도했고, 그 목표가 서방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유라시아 대륙 더 깊숙한 곳까지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명백한 진실이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1990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가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했던 약속을 깨뜨린 것이다. 당시 소련은 이 약속에 따라 독일이 통일 후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한 바 있다.

4. 푸틴은 국제 노동계급의 친구가 결코 아니다. 그는 억압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을 이끄는 동시에 대러시아 국수주의를 부추겨 이데올로기적 지지를 얻으려 하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재건해 이른바 '가까운 외국'[옛 소련의 일부였던 국가에서 지배력을 유지하려 한다. 대표적으로 체첸의 독립 운동을 무력으로 짓밟은 것, 2008년 조지아[당시 이름 그루지야]와 전쟁을 벌인 것,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대중 항쟁에 맞서 개입한 것이 있다. 더 먼 곳으로는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동원해 잔혹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구해 준 것이 있다.

5. 그럼에도 이번 위기를 고조시킨

것은 미국이고, 영국의 엉망진창인 보리스 존슨 정부도 이를 부추겼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푸틴의 주요 요구를 진지하게 고려하길 거부했고, (친서방 성향인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전쟁 위기에 기름을 붓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고,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더 많은 병력을 러시아 국경 쪽에 배치시켰다.

6.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를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20세기에 이미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제1차세계대전, 러시아 혁명에 맞서는 반혁명 군대의 침입, 1930년대 스탈린의 농업 강제 집단화, 1941년 나치의 소련 침공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은 1991년에 민족 자결권을 행사했고 이는 소련 해체의 신호탄이 됐다. 하지만 그 뒤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은 부패하고 서로 경쟁하는 올리가르히* 패거리들에게 지배당해야 했는데 이제 그 올리가르히들은 각각 서방과 러시아 쪽에 기대고 있다. 2014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의 일부 동남부 지역에서는 중앙 정부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과 상시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나토군이든 러시아군이든 더 많은 군대는 필요하지 않다!

7. 서방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고조시키는 데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세

계적 경쟁이 연관돼 있다. 바이든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중국의 대만 강제 병합 시도를 일절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 주려 한다.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푸틴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런 대결로 국제 지배 체제가 제국주의 블록 간 경쟁 구도로 파편화될 수 있고, 그만큼 인류 전체를 파괴시킬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키울 것이다.

8.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한다! 러시아와 나토 병력 모두 철수하라!
- 나토는 확장이 아니라 해산해야 한다!
- 유럽을 비무장화하라!
- 군비 경쟁을 중단하라! 그에 낭비되는 자원은 빈곤과 기후 변화 대응에 대신 쓰여야 한다!

9. 우리는 제1차세계대전 당시 어느 쪽에도 편들기를 거부했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정치적 전통을 따른다. 이 전통을 이끈 레닌과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 간 축적 경쟁 탓에 필연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제국주의 체제에서 벗어날 길은 오로지 국제 사회주의 혁명뿐이라고 봤다. 룩셈부르크의 동지였던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주창한 구호 "주적은 국내에 있다"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표어다.

2022년 2월 16일

번역 김종환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에서 포격으로 파괴된 유치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나토-우크라이나 관계에 대한 미-러 입장 차이가 이번 위기의 배경이다. 사진은 2017년 우크라이나 군이 나토 병력과 함께하는 모습

사진: 로이터

왜 우크라이나 위기는 질질 끌어오고 있는가

[1961~1964년 미국 법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케네디는 냉전 시기 최대 위기였던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를 회고하는 책을 내면서, 제목을 [그 위기가 지속된 기간을 따서] 《13일》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위기는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악화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어떤 점에서 이 충돌은 실질적이기보다는 상징적이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심 요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지 않겠다고 미국이 보장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성사될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다. 새로운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30개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한 국가가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뭐하러 러시아와의 전쟁 위험을 감수하겠는가?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꿈에서나 일어날 일”일지도 모른다고 언젠가 말한 바 있다.

푸틴은 심중팔구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도 벌어지지 않게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심중팔구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 해도 그것의 방지를 보장해 주지는 않으려 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어느 쪽도 굽히는 모습을 보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푸틴은 나토가 동유럽과 흑해를 잠식해 들어오는 것에 실질적인 안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 제국주의를 — 한때 오바마가 거만한 태도로 일컬었던 것처럼 — “역내 강국”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플레이어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한편, 바이든의 국내 정책은 국회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여론 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게다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지정학적 후퇴, 즉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함락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스왈프 노츠” 칼럼은 이렇게 지적한다.

“바이든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추락한 시점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한 날짜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지지율이 마지막으로 50퍼센

트를 넘었던 때는 미국이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그 후 바이든 지지율은 줄곧 50퍼센트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40퍼센트 선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을 굴복시키면, 국내에서 정치 판세를 다시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종종 비교 대상이 되는 쿠바 위기와 달리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쿠바 위기는 당시 소련 지도자인 니키타 흐루쇼프가 핵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미국의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쿠바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에 맞서 흐루쇼프는 그 정부를 지키려 했다.

미사일 배치

케네디는 미사일이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쿠바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단행했다. 세계는 핵전쟁 직전으로 치닫는 듯했다. 그러자 흐루쇼프는 추가로 미사일을 싣고 가던 소련 군함의 뱃머리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딘 러스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눈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방금 상대방이 눈을 살짝 감은 것 같다.”

사실 양측 모두가 눈을 감았다. 시어도어 부르히스가 문서보관소의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여 최근에 낸 흥미로운 연구서인 《두 10월의 총성 없는 총》은 케네디와 흐루쇼프 모두 핵전쟁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스파이들과 기자들을 통해 수개월간 비밀리에 의사를 주고받았다. 케네디는 두 가지를 양보해 흐루쇼프로 하여금 신속하게 미사일을 철수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케네디는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터키와 이탈리아에 배치된 소련을 겨냥한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이 중 두 번째 약속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케네디가 그해 11월에 열리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공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승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흐루쇼프는 먼저 굽힌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에 개의치 않았다. 케네디에게서 기대 이상의 양보를 받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이든과 푸틴 모두 먼저 굽힌 사람으로 비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은 패배를 겪은 두 제국주의 열강의 갈등이다. 러시아는 냉전의 패자였고 미국은 중동의 패자였다. 그래서 둘의 조합은 위험하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3호 번역 이원웅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전쟁 일보 직전으로 치달을 때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그리고 나토와 유럽연합의 동맹국들—이 러시아 연방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이런 질문이 첨예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파와 언론들은 다른 어떤 나라와 맞서더라도 “우리” 나라를 지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취한다. 특히 전쟁 문제에서는 더 그렇다.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가 이끄는 노동당이 여기에 합세했는데, 노동당은 러시아 정부가 특히나 호전적이고 부패한 정부라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끔찍한 인권 억압 전력을 지적하며, 당연히 모두가 이 불한당에 함께 맞서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그럼으로써 노동당은 영국도 세계 곳곳에서 폭격과 고문, 착취를 자행한 바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물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국가가 반동적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체첸공화국 등지에서 푸틴이 벌인 범죄를 은폐하려 들지 않는다. 푸틴 지배 체제하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무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국내에 있는 것이다.

기만

우리는 보리스 존슨과 조 바이든의 명령에 따라 동유럽 노동계급을 학살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제주의의 기치를 내걸어서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푸틴에 맞서도록 러시아 노동계급을 고무하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는 제1차세계대전에 맞선 혁명적 저항을 본받은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은 최소 1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914년에 전쟁이 발발하자 자유주의자들과 개혁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은 곧바로 자국 정부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상대국의 “잔혹 행위”와 “제국주의”를 맹비난했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독일의 팽창주의를 비난했고, 독일 사회민주당은 러시아 차르의 폭정을 비난했다. 러시아 자유주의자들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 억압당한 세르비아인들의 대의를 옹호하겠다고 나섰다.

좌파의 상당수조차 자국 지배계급

독일 혁명가 카를 리프크네히트(1871~1919)



제국주의에 맞서기 왜 “주적은 국내에” 있는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도 저서가 번역·소개된 바 있는 영국의 친노동당 인사 폴 메이슨이 얼마 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성명(3면을 보시오)을 비판하는 글을 냈다. 그는 러시아의 호전성과 서구 민주주의의 진보성 등을 이유로 러시아에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주의경향이 “주적은 국내에 있다”고 강조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유리 프라스드**가 쓴 이 글은 폴 메이슨의 글보다 먼저 나왔지만, 이런 주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천 책



레닌 평전 2

—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토니 클리프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576쪽, 21,000원

이 책은 레닌의 생애 중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부터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1917년 10월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레닌의 혁명적 패전주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다른 나라 지배계급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수의 혁명가들은 이러한 기만에 반대했고, 자국 지배계급의 범죄에 맞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전투에 집중함으로써,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체제와 약소국에 대한 억압을 끝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사회민주당의 좌파 의원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가장 처음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그는 의회에서 연설 기회를 거부당하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유인물을 발행했다.

그 유인물에서 리프크네히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자국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이 정치적 싸움을
계속 벌여야 한다.**

“모든 인민의 진정한 적은 그들 자신의 국가 안에 있다. 독일인들의 주적은 독일에 있다. 독일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는 독일 정당들, 독일의 비밀 외교가 바로 그 주적이다.” “독일인들이 맞서 싸워야 할 적은 바로 우리 독일인들이 사는 이 땅에 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 자국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투쟁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이 정치적 싸움을 계속 벌여야 한다.”

혹독한 대가

이는 독일 지배계급의 적들이 자행하는 억압을 용서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리프크네히트는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면서도 영국이 아일랜드와 인도, 아프리카 도처에서 벌인 악행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상대편” 지배자들이 학살자이고 억압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국 지배자들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더 나쁘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리프크네히트는 힘줘 말했다.

이런 원칙 있는 입장 때문에 리프크네히트는 의회에서 고립됐고 독일 사회민주당에서도 고립됐다. 그러나 그의 입장은 러시아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의 입장과 일치했다. 레닌은 1915년 이렇게 썼다. “혁명적 계급은 반동적 전쟁에서 자국 정부가 패배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자국’ 정부를 혁명으로 전복하는 것뿐이며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지금의 전쟁에서 자국 정부가 처한 곤란을 이용해야 한다고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리프크네히트는 독일 사회민주당 내 동료들에게 외면당했지만 그의 주장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1916년이 되자, 전쟁에 지친 병사들과 굶주린 민간인들 사이에서 전쟁 반대 여론이 커졌다. 1916년 5월 1일 리프크네히트의 조직은 베를린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고 1만여 명이 여기에 참가했다.

일설에 따르면 리프크네히트는 군중 한가운데서 “전쟁 반대, 정부 타도”를 외쳤다. 이 때문에 그는 체포됐고 결국

수감됐다. 그의 두 번째 재판일에는 베를린 노동자 약 5만 5000명이 리프크네히트 지지 파업을 벌였다. 형을 선고 받자 리프크네히트는 재판정에서 이렇게 외쳤다. “그 어떤 장군도 내가 입게 될 죄수복만큼 명예로운 제복을 입은 적이 없을 것이오.”

리프크네히트는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이런 저항을 벌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 1919년 1월 그는 우익 무장 조직에 의해 살해됐다.(공식적으로는 체포를 피해 “도주를 시도하다” 사살된 것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리프크네히트의 죽음 이후에도 제국주의 전쟁에 맞선 투쟁과 계급 전쟁의 융합은 노동계급의 분노가 폭발하는 형태로 계속 이어졌다. 어느 전쟁에서든 가장 혹독한 대가를 요구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전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전투가 매우 광범하고 참혹하게 벌어져서 직업 군인만으로는 역부족이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과 중간계급의 일부가 징집된다.

제1차세계대전과 제2차세계대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1950년 한국 전쟁과 1964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타지에서 싸우다 죽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정부가 시민적 자유를 축소하고, 세금을 올리며, 복지를 삭감한다.

저항의 결합

전쟁을 멈추려면 반전운동은 이런 문제와 다른 쟁점들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한다. 제1차세계대전 동안에는 대중 파업과 반란이 가장 핵심적인 전술이자 저항을 결합시키는 수단이었다. 매 불법 집회는 “국민”을 대변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약화시켰다. 파업, 특히 군수 공장에서 벌어진 파업은 전쟁 수행을 갈수록 더 어렵게 만들었다. 참호 안에서 일어난 반란은 지휘관들 사이에서 공포를 자아냈다.

식민지 억압을 받던 인민들의 반란은 그 전쟁을 벌이던 제국들을 산산조각 날 위협에 빠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반대, 정부 타도” 1918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는 독일 혁명가 카를 리프크네히트

불법 투쟁에 가담하려면 단지 목숨만 걸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다. 주적은 자국의 지배계급이라는 리프크네히트와 레닌의 입장을 지지해야 했다.

이후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자”는 레닌의 구호가 옳았음이 입증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17년 4월 서부 전선에서는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벌인] 공세로 25만 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절반에 달하는 프랑스 병사들이 전선으로 복귀하기를 거부했다. 몇몇 부대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혁명가 “인터내셔널가”를 불렀다.

뒤이어 이탈리아에서는 병사 5만 명이 반란을 일으켰고, 프랑스 북부의 영국군 기지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러시아에서 2월 세계 여성의 날 시위는 노동자 40만 명이 ‘차르 타도’와 ‘전쟁 반대’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사건들은 1917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혁명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 1919년 헝가리에서는 노동자들과(러시아의 전쟁 포로였던 사람이 이들을 이끌었다)이 권력을 장악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공산당원들과 사회민주당원들이 정권을 잡았다. 대중 파업



전쟁이 아니라 복지에 투자하라 2월 5일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

이 유럽 대륙 전역에서 벌어지자 영국 총리 로이드 조지는 [비밀 서신에] 이렇게 썼다. “유럽 전체가 혁명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모든 기존 질서가 유럽 전역의 대중에게 의문시되고 있다.” 기존 질서를 공고히 하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시작된 이 전쟁은 결국, 자본주의 지배계급이 그 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심각한 위기를 낳았다. “혁명의 기운”은 완전히 다

른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하고 제국주의와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킬 가능성을 열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진정한 적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선언할 태세를 갖춘 사람들이 성취한 것이었다. 그들은 혁명적 분노가 자국과 전쟁터에서 학살을 지시하는 자국 지배계급을 향하도록 했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793호 / 번역 강미령



사진은 기아르그로브를 고사

온라인 토론회 발제문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김준호

이 글은 2월 17일 같은 주제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역에 강대국들의 군대가 대거 집결해 있다.

한편에는 러시아군이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국경에 10만 병력을 투입했고, 최근 벨라루스에 3만 병력을 투입해 기동 훈련을 벌였다. 훈련 장소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고작 200킬로미터 거리였다.

다른 편에는 미군과 나토군이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며 동지중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하고, 최정예 전투부대 수천 명을 동유럽에 증파했다. 폴란드와 발트해 3국에는 나토의 신속기동군이 투입됐고, 영국 등도 소규모지만 파병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와 인접한 동남부 돈바스 지방에 400킬로미터에 이르

는 참호를 파고 군대를 결집시켰으며, 서방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을 두고 대치하는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배치한 병력을 이용해 미국에게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얻어내고자 한다. 또 러시아 국경 인근에 나토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지 말고, 나토 병력을 냉전 때만큼 서쪽으로 물리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이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 인근 지역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들은 이번 위기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처럼 다룬다. 그러나 현 위기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간 충돌이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열강이 결집해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데서 보듯이 말이다.

이 글은 왜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와 쟁점을 살펴보고, 이 위기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다룰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길래

현재 위기의 직접적 계기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둘러싼 것으로, 푸틴이 나토의 확장을 경계하면서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나토 확장 문제는 옛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는 1990~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크라이나 역사를 짧게 살펴봐야 한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된 이 지역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오랫동안 양쪽 모두의 영향을 받으면서 양쪽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그런 만큼 20세기 들어 양쪽 세력 모두에 시달리며 전쟁의 참상을 겪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고, 스탈린의 집단화 정책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또, 제2차세계대전 때는 나치의 학살을 겪었다.

냉전기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소비

에트연방)의 일부였지만, 소련이 위기에 빠지면서 민족주의가 강해졌고,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에도 러시아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가 밀접했지만,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 했다.

우크라이나 지배층 일부는 독일 같은 서유럽 국가들과 무역을 늘리고 시장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득이 되리라 봤다. 지배계급은 여러 분파로 나뉘어 격렬한 쟁투를 벌였다. 그러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평범한 대중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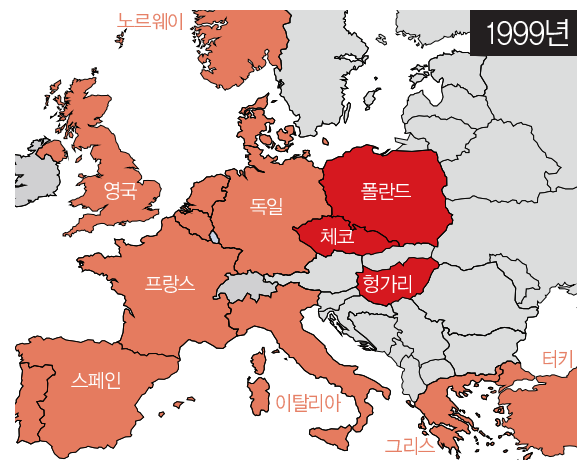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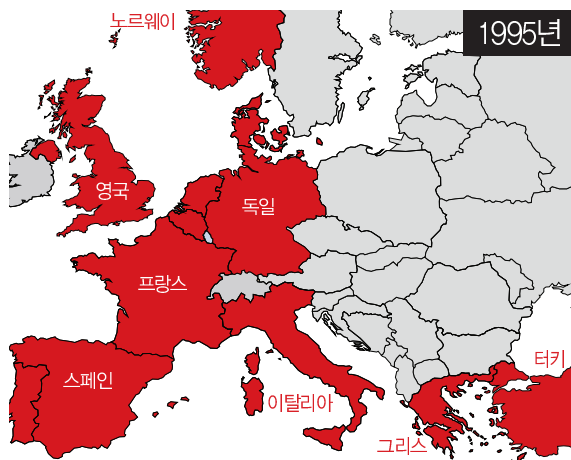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친서방 쪽으로 기울었는데, 그러자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점령했다.(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다룰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도 친서방 성향이다.

나토의 '동진'

미국과 서유럽은 군사 동맹 나토를 이용해 영역권을 동쪽으로 거침없이 넓혀 갔다

기존 회원국
신규 가입국 (1995년에는 기존 회원국)

제작 장한빛



미국과 서유럽, 영향권을 넓히다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기운 것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이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온 것과 맞물려 있다. 이들은 옛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그리고 이제 러시아 변경이 된 국가들까지 영향권을 거침없이 넓혀 갔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는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친서방 영향권에 들면, 서방이 중앙아시아의 막대한 천연자원에 손을 뻗치고 러시아를 제압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미국과 서유럽의 영향력 확장은 나토의 동진과 발맞춘 것이다. 군사적 보호를 약속하며 동유럽 국가들을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했던 약속을 대놓고 어긴 것이다. 1991년 당시 소련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통일 독일의 나토 가입을 인정해 주는 대가로 미국에게서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클린턴 정부는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소련 해체로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가 된 틈을 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공세적인 동진을 했다. 그 과정에서 참혹한 전쟁도 벌어졌다. 1990년대 발칸 전쟁이 대표적 사례다.

나토의 공세적 동진은 서유럽 부국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졌다. 이들은 동구권에서 값싼 노동력과 수출 시장을 얻어내려고 미국에 적극 협조했다. 특히, 독일이 여기서 크게 득을 봤다.

그래서 2009년이 되면 옛 동구권 국가 중 12곳이 나토에 가입하고 그 중 11곳은 유럽연합에도 가입하게 됐다.(지도를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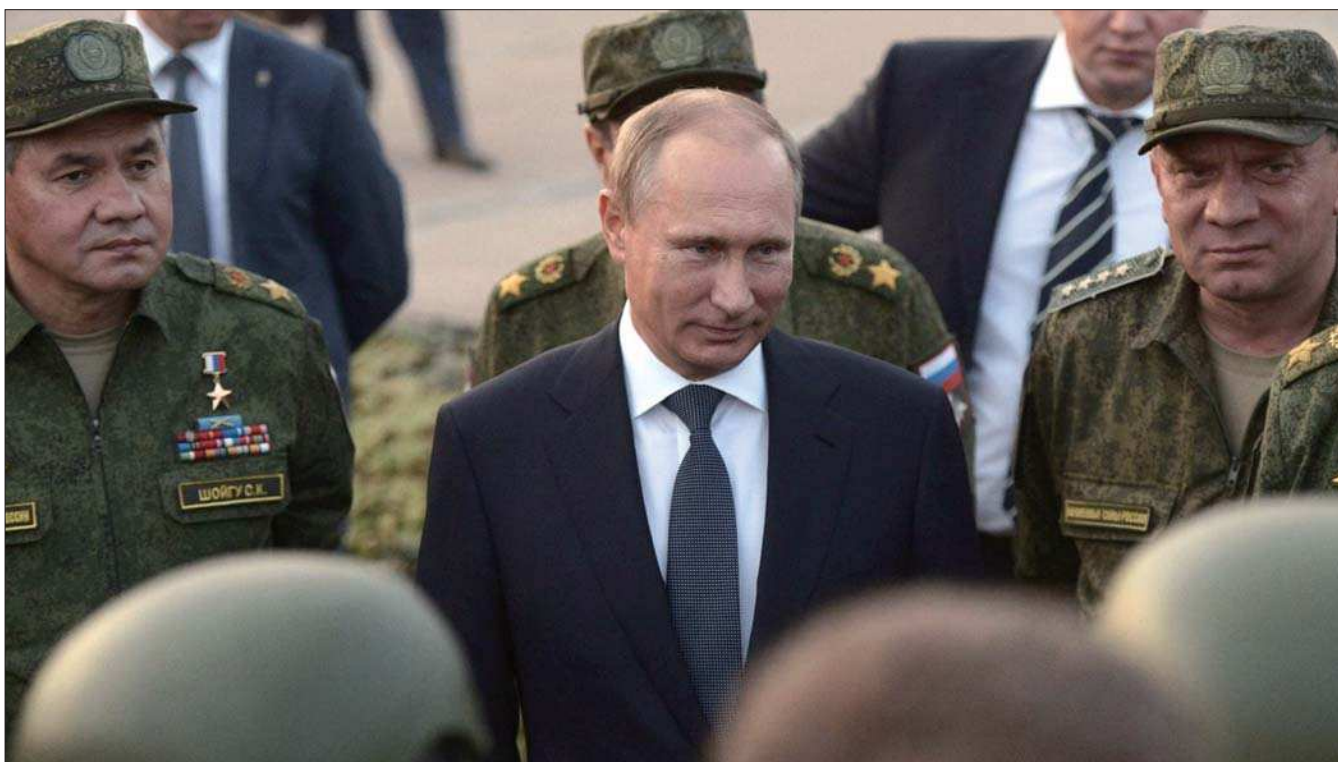


사진 출처: kremlin.ru

풍부한 천연자원과 군사력으로 위상을 끌어올린 러시아는 동유럽에서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

러시아의 대응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매우 약해진 상태여서 1990년대에는 서방 열강의 동진에 별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고유가와 푸틴 집권이 맞물리면서 상황이 변했다.

푸틴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군사 강국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러시아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석유와 가스를 수출해 번 돈으로 군대를 재무장했고,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도 키웠다. 최근에는 리비아 내전과 시리아 내전에도 개입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도 영향력을 뻗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졌고, 2008년에는 경제 위기의 진양지가 돼 위상이 전만 못하게 됐다.

푸틴은 이 틈을 타서 옛 소련의 일부였던 공화국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이익을 관철하기 시작했다.

2008년 조지아 침공이 그런 사례였

다. 침공의 명분은 조지아가 친러시아계 소수민족을 핍박한다는 것이었지만, 진정한 이유는 조지아가 나토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이었다.

크림반도

또 다른 사례는 2014년 우크라이나에 개입해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이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정치 불안정이 심각했고, 반부패 대중운동으로 친러 성향인 당시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나 이 운동은 유럽연합에 환상이 있었고, 노동자들은 친러시아 민족주의와 반러시아 민족주의로 분열돼 있었다. 이를 틈타 친서방 우파 정부가 집권해 유럽연합·나토 쪽과 거리를 좁히려 했다.

그러자 푸틴은 이에 대응해 크림반도를 점령했다. 크림반도는 지중해로 통하는 바다인 흑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 중요한 곳이다.

이후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친러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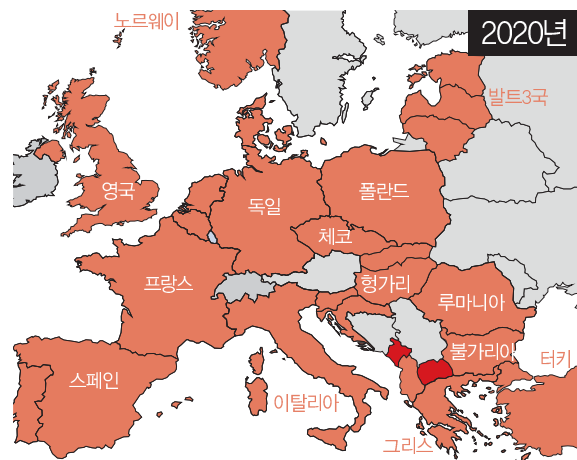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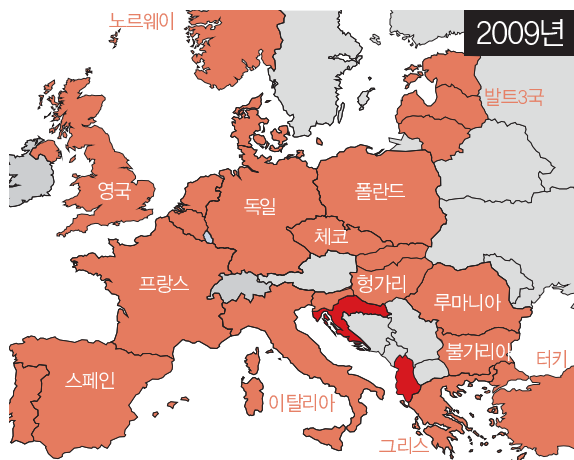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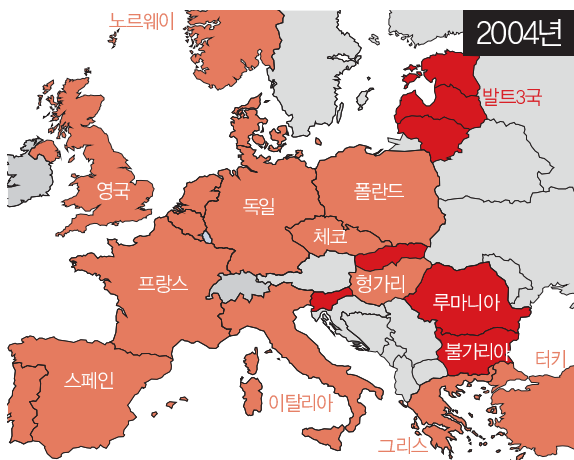
력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내 분열을 조장하고 저강도 전쟁을 벌여 왔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면서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의 이와 같은 지역적 도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

미국의 위세가 장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며 지역적 수준에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잡으려 한다.

러시아가 2020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전쟁에 배후에서 개입한 것, 2021년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 개입한 것, 올해 1월 카자흐스탄에서 대중 항쟁이 벌어졌을 때 파병해 항쟁을 진압한 것도 그런 사례의 일부다.

▶ 10면으로 이어짐



▶ 9면에서 이어짐

러시아와 미국의 위험한 치킨 게임

그러면 이번 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미국은 전쟁 위험성을 부풀려서 애기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러시아가 2월 16일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한국을 포함해 서방 국가들이 줄줄이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민 철수 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푸틴이 군사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거봐라, 푸틴은 결국 군사 행동을 하지 못했다'며 푸틴을 약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려고 전쟁 위험을 부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같은 이유로 푸틴의 침공을 부추기게 되는 위험한 도박이다.

물론, 실제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점

령하지는 않을 듯하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건대 그런 선택이 러시아에 큰 짐이 될 것임을 푸틴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바이든과 푸틴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접경에 배치한 군사력을 이용해 미국한테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바이든도 러시아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푸틴을 최대한 압박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치킨 게임이 언제나 당사자들의 의도대로 관리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지금처럼 긴장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 쪽의 사소한 계산 착오나 우발적 사건으로도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충돌이 시작되면 관련국 모두가 도미노처럼 거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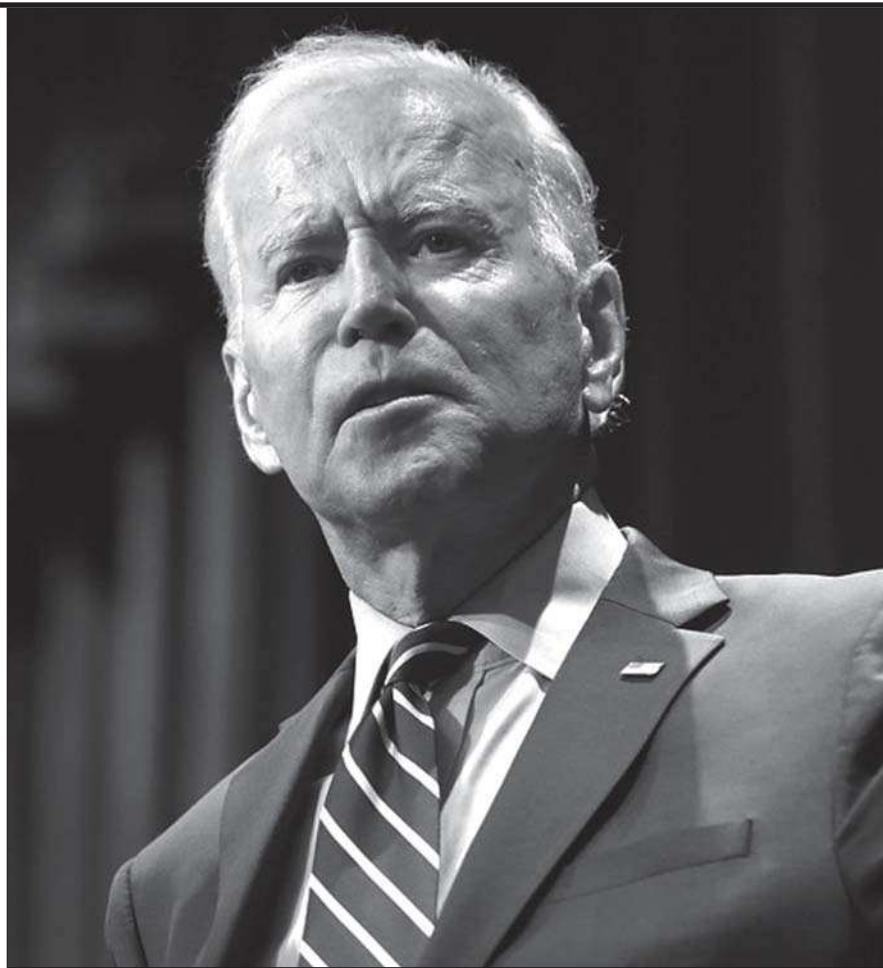


사진 출처: Gage Skidmore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이 굽히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말려들지도 모른다.

이번 위기에 걸린 러시아와 서방의 이해관계가 모두 만만치 않다는 점도 치킨 게임을 위험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에서 고작 7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나토군이 들어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나토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

반면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를 공식화하면, 대(對)러시아 안보를 보장받으려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모두가 동요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 있다.

또, 미국은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위기에서 호락호락 물려서기 어렵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가져가게 두면, 시진핑은 중국이 대만을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전쟁을 원치 않으면서도 상대가 먼저 물려서기를 바라며 계속 뺏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치킨 게임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벌이는 위험한 도박이다.

강대국들 간 경쟁 체제가 위기의 근본 동인

이번 사태의 본질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일부 좌파들조차 러시아의 평화협정 위반이 이번 사태를 낳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시각으로는 이번 사태가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는 점, 강대국들 간의 경쟁 압박이 근본 동인이라는 점을 놓치게 된다.

제국주의는 강대국들 간의 경쟁 체제다. 흔히 '제국주의'를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로 생각한다. 물론, 그런 제국은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특징은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결합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자신의 힘을 국제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한 자본, 산업 기반, 기술을 필요로 한다. 자본도 해외로 진출해서 경쟁하려면 강력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국주의를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최강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제국주의를 미국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체제하에서는 경제적 쟁투와 지정학적 쟁투가 교차·결합돼 벌어지고, 그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국가들은 모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압박이 바로 쟁투가 끊이지 않게 만드는 체제의 본성이다.

따라서 일부 좌파들처럼 지금 러시아가 미국에 본패를 보여 준다면 은근히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사람

들은 미국만 제국주의라고 보고 러시아나 중국은 그에 맞선 진보적 대안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러시아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다.

올바른 태도

그러면 이번 위기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친서방 나라에 사는 우리는, 미국과 서방에 대한 반대를 출발로 삼아야 한다. 그러잖아도 한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 맞서 미국과의 공조를 약속했다. 우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데에, 그리고 이에 협력하기로 한 한국 정부에 반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의 푸틴을 친구로 여겨서도 안 된다. '적의 적이 친구'는 아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치닫는 위험한 갈등과 충돌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를 것은 당사국 모두의 평범한 노동자 대중이다. 우리는 그들이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 전쟁을 낳는 제국주의 체제에 반대하고 서로 연대하기를 바라야 한다. 강대국 간의 파괴적 경쟁을 끝낼 힘은 바로 이들에게 있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서방,
전쟁으로 가나?



사진 출처: 러시아 국방부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

시청자 전화 발언

“국제 협약으로 갈등 해결 기대하기 어려워”

이번 긴장을 해소할 방법으로 민스크 협정의 부활, 새 안보 협정 체결, 우크라이나 중립화 등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금 상황에서 이 방안들은 시간을 잠시 벌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조처에 기대를 걸 수 있음도 인정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법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한다.

민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이 2014년에 맺은 휴전 협정이다. 지금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등이 민스크 협정의 부활을 말하지만, 사실 이 협정은 지난 6년 동안 유명무실했다.

이 협정이 있는데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계속 교전이 벌어진 것이다. 오늘[2월 17일] 오후에도 러시아 언론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집단들을 폭격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폭격 사실

을 부인했다.

새 안보 협정도 맺어지기가 힘들 것이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러시아에게 나토를 동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도 금세 깨졌다. 러시아는 자신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약속을 위반한 입장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고(故) 리영희 교수는 국제 협약은 휴지 조각이 되기가 매우 쉽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한국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서방이 약속을 많이 어겨 왔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설사 새 안보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 역시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부터가 나토의 확실한 안보 보장을 바라고 있는 현실이다.

러시아 혁명이 레닌은 제국주의가 국가들 간 경쟁 체제이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항구적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이것을 보여 준다.

차승일

시청자 전화 발언

“핵무기 있었어도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랬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갈등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에 있던 소련의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인수하면서 졸지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됐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무기를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는데, 2000년에야 비핵화 과정을 대략 마무리한다. 1991년 이후 각서에 서명하기까지 몇 년이 흘렀던 것은, 우크라이나 지배자들이 핵무기 포기를 주저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에는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의 압력도 작용했다. 우크라이나 지배자들이 보기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서방한테 경제 협력과 지원을 얻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잠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기간에도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적 경쟁이라는 장기판 위의 졸 신

세를 면치 못했음을 보여 준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해도 위험과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 더 위험했을 수도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계속 보유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이나 공격 시도를 한동안 주저했을 수는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를 더 경계했을 것이다.

만약 세계 3위 핵무기 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한다면, 러시아가 과연 지금처럼 재래식 병력 13만 명을 국경에 배치하는 정도로만 위협했을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과 공격(협박)을 했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는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사고의 현상이기도 하다. 당시 사고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됐고, 아직도 우크라이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가 핵무기 포기를 원했다.

김영익

시청자 전화 발언

“러시아·우크라이나인들은 서로 원수 아냐”

나는 러시아인 하우스메이트와 같이 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는 국적이 러시아인데 그의 친동생은 국적이 우크라이나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불과 몇 십 년 전까지 한 나라(소련)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두 나라는 (남북한과 달리) 사람들의 왕래도 활발하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번 위기가 순전히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부추긴 것이지, 두 나라 민족이 불구대천의 원수라서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그러면 [두 민족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 생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좌파들이 우크라이나의 핵심적 문제들에 충분히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 그간 우크라이나에서 빈부 격차 등 사회경제적 문제 혹은 제국주의 갈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노동자들이] 친러시아파와 친유럽파로 분열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혁명적 좌파가 거기서 올바른 주장을 하며 성장할 기회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했던 듯하다.

[우크라이나 사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쟁의 노름판에서 놀아나지 않으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혁명적 좌파가 성장해야 할 것이다.

장승준



민스크 협정에 참여한 5개국 정상들. 왼쪽부터 벨라루스(루카셴코), 러시아(푸틴), 독일(메르켈), 프랑스(올랑드), 우크라이나(పో로셴코)

독자편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

이 독자편지는 2월 21일 날짜로 본지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을 지면으로 옮겨 실은 것이다. 하단 글은 그 이튿날 김인식이 그에 대해 답변한 것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의 윤미향 제명 시도 반대[김인식 기자의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 중단하라'는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존 입장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우선, 이 기사에서는 '1. 사법적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명 시도를 반대하고 있는데, 다른 기사의 김문성

기자가 쓴 기사에서는 문재인이 한 달이나 지나 윤미향을 언급한 것을 생뚱맞고 뒤늦었다고 비판합니다. 우리 신문이 부르주아 사법 기관을 공정하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런 사법적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모든 국회의원의 부패나 비리 문제에 대해 부르주아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정당한 대처인가요? 사법적 결론이 나온 이후에야 당이 조치를 취한다면 너무 뒤늦은 대처가 되지 않을까요?

2. 언론에 의해 윤미향 의원의 횡령

액수가 부풀려지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내용도 이전의 기사와는 상충합니다. 이전의 김승주 기자의 기사에서는 최대 37억 원의 회계 장부 구멍이 있고, 안성 쉼터 고가 매입에 대해서 정의연 측이 제시한 증거에 관해 해명을 미루고 있으며, 정대협 회계에서 수백만 원이 아니라 매년 수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 계좌를 낚두고 개인 계좌로 해외 사업비나 피해자 장례 비용을 모금하고, 자신과 가까운 단체들에 재기부를 한 의혹이 있는 점도 보도를 했구요. 이 점은 단순 회계 미

비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횡령을 했던 측면을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김승주 기자는 "윤의원이 비판받는 이유가 천대받는 소수자 정체성이나 좌파 사상 때문도 아니다. 대중이 제기하는 것은 범국민적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얻은 혜택과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문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상직과 박덕흠의 경우 사법적 판결이 났지만, 윤미향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구별돼야 하지만, 윤미향 또한 횡령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

‘윤미향 제명을 반대해야 할까?’에 답하며

김샘 씨가 윤미향 의원 제명 시도를 반대하는 게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묻는 편지를 보내 왔다.(지면 제약상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 반말체로 쓰는 것을 양해해 주기를 바란다.)

아마도 김샘 씨가 보기에 윤미향 의원은 "지배계급 정당의 일원"이자 "국가기관의 하나"가 되면서 바리케이드 저편으로 넘어갔는데, 혁명가들이 그를 방어할 까닭이 있냐는 것이다.

먼저, 정당과 운동의 다소 복잡한 관계를 알아야 한다.

김샘 씨 지적대로, 민주당은 "지배계급 정당"이다. 그러나 이것을 민주당은 지배계급(자본가+정치 권력자)으로 구성된 정당이라는 뜻으로 협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지배계급의 객관적 이해관계를 의식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으로 봐야 한다. 정당의 강령과 무엇보다 일상적 실천을 통해서 말이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보통 채찍(힘)과 당근(동기)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사용된다. 군대·경찰·검찰·교도소·정보기관 등이 전자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노동계급의 적어도 부분적인 묵인 없이는 자신의 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피지배 계급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도 아울러 사용한다.

후자의 지배 방식을 실행하는 데서 민주당이 전통적인 우파 정당 국민의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능함'을 보여 준다.(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부가 전자



정권교체운동본부 기자

의 방식을 배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가공할 경찰력으로 대중의 저항을 수차례 짓밟았다.)

민주당은 당내 개혁파 정치인들을 통해 피지배 계급 운동의 지도자 일부를 자기 당에 수혈해 왔다. 윤미향 의원도 지난 2020년 총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비례대표 전용 선거 연합 정당) 우회종 공동대표에 의해 영입됐다.

최근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가 권인숙 의원의 제안을 받아

이재명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다.(전두환 정권의 성고문 사건 피해자이기도 했던 권인숙 의원도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지예 씨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 참여했다가(또는 윤석열에 의해 영입됐다) 당내 반발 때문에 밀려났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운동 초창기부터 그 운동에 중심적으로 참여했고 지금도 그 운동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물론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운동을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대표했느냐 하는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노동자 연대>가 비판적으로 다뤘던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샘 씨가 시사하듯이, 윤미향 의원이 "지배계급 정당의 일원"이 되는 순간 더는 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됐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정의기억연대·진보당·한국진보연대 등이 그의 제명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김샘 씨는 윤미향 의원이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없게 돼서 민주당이 용도 폐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지만, 이 단체들의 윤 의원 방어 행동은 김샘 씨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방증한다.("운동 통제"라는 단어가 세계 느껴지는데, 운동과의 밀접한 연관성과 영향력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이렇듯 윤미향 의원이 여전히 위안부 운동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윤미향 의원과 박덕흠·이상직을 구별했던 것이다. 박덕흠·이상직은 실제로 자본가 계급의 일원이고, 그들이 저지른 비리는 수십 년 동안 지겹게 봐온 구조적 비리였다.

물론 우리는 피지배 계급 운동의 지도자들이 "지배계급 정당"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그 지도자들이 운동의 압력을 민주당에 전달해 상황을 개선하기보다 민주당이 대변하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운동에 관철시키는 측면

는데 그를 방어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윤미향을 제명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노동자연대 기사에서 ‘윤미향, 정의연 사건을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윤미향과 민주당이 모종의 책임을 진작에 져야 했던 것 아닌가요? 윤미향 제명을 방어한다면, 우리는 사법적 판결이 날 때까지 민주당과 윤미향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게 맞나요? NL 동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받았을 때, 우리는 그들을 사상의 자유와 지배계급에 맞서 바리케이트 안에서 같이 싸우는 동지인 점 때문에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사상의 문제로 탄압받는 것도 아니고, 지배계급 정당의 일원이며, 그가 “과거에 어떤 실천을 했던 국가기관의 하나”입니다. (진영논리와 윤미향 · 정의연 변호론 ①: 윤미향 변호의 진정한 대상은 문재인 정부’ 인용) 민주당의 윤미향 제명을 노무현 탄핵과 비교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노동자연대는 노무현 탄핵을

반대했고요. 우파가 노무현의 정치조차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고 탄핵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변하는 정치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운동을 잇는 가교로서 운동을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논란을 지우려 윤미향을 제명하는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윤미향은 법적으로는 아직 무죄입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현대중공업이나 명성교회로부터 기부를 받아 할머니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곳에 쉼터를 만들고, 할머니들에게는 막상 온수매트조차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윤미향을 제명한 것은 위안부 운동의 개혁주의적인 압력조차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운동의 리더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미향을 방어하는 것이 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샘

이 더 실질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운동을 체제 내로 순치시키는 데 일조했다.

마녀사냥

필자는 물론이고 윤미향 · 정의연 사건을 주로 다룬 김승주 기자(나 김샘 씨가 언급한 김문성 기자)도 회계 부정 의혹 사건을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안부 운동은 마녀사냥에서 흔히 사냥감이 되는 힘없는 이견자나 기성 체제 반대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히 국민적 지지를 받은 운동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일부 기업주들까지 포함하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는 게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마녀사냥 대상자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다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주 평화 활동가들이다. 안타깝게도, 이 활동가들은 진보당으로부터도 방어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마녀사냥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주의자들이 방어해서는 안 될까? 가령, 혁명이 전개되던 1917년 9월 초 러시아에서 총사령관 코르닐로프 장군이 혁명을 분쇄하기 위해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볼셰비키는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군사적으로) 방어했다. 케렌스키가 마녀사냥 당하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케렌스키는 레닌

을 독일 첩자로 몰아 볼셰비키를 불법화했다. 그럼에도 코르닐로프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혁명이 패배해 러시아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볼셰비키는 동궁(임시정부 청사)을 군사적으로 방어했다.

2004년 3월 우파 정당들인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노무현을 국회에서 탄핵하자, 우리는 노무현을 비판적으로 방어를 했다. 노무현이 마녀사냥을 당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선출된 대통령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거하는 행위).

게다가 민주당이 윤 의원 제명을 시도하면서 2020년 회계 부정 의혹 논란이 일던 것에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민주적 기본권인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하는 민주당의 징계 시도에 초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

김샘 씨 지적대로, 윤미향 의원이 사상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쟁점은 회계 문제였다. 우파 언론들이 온갖 회계 부정 보도들을 쏟아 냈다. 그러나 우리는 제기된 의혹들을 말 그대로 의혹 수준에서 신중하게 접근했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철저하게 증거를 요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승주 기자도 회계 부정 “의혹”, “혐의”라고 조심스럽게 서술했다.

김승주 기자가 윤미향 의원 측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두고 곧장 부패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덧붙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 않은 말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생겨나곤 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김승주 기자가 해당 기사에서 “고의적으로” “횡령을 했던 측면”을 비판했다고 김샘 씨가 언급한 것은 김샘 씨 본인의 자의적 해석이 가미된 것이다. 김승주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자기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피해야 한다.

김문성 기자의 주장을 언급한 것도 맥락에서 떼어 낸 것이다. 2020년 5월 이 문제가 터지고 한 달여 뒤 6월에 문재인이 처음 입을 열었는데, 위안부 운동 대의 손상 시도 반대, 시민운동 기부금이나 정부 보조금 투명 관리 같은 하나 마나 한 얘기를 했다고 김문성 기자가 꼬집은 것이다.

그러므로 김문성 기자가 마치 문재인이 윤미향 징계 같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처럼 시사해서는 안 된다.

필자나 김승주 기자가 회계 부정과 관련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은, 사회주의 신문이 증거도 없이 선부르게 단정했다가 오보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진실은 사회주의 신문의 생명이다.

그런데 처음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회계 부실 · 부정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

할 수 있는 강제력을 보유한 기관은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수사기관들밖에 없었다. 우리를 포함해 어떤 운동 단체들도 수사 단계에서 그런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막상 검찰은 우파 언론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 중 다수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작은 일부만을 기소했다. 검찰은 회계 증빙 자료가 없는 지출을 개인 소비(횡령)로 봤는데, 이조차 현재 재판에서 첨예한 쟁점이 돼 있다.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샘 씨처럼 부르주아 법정의 판결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요즘 좌파 진영의 나쁜 세태 중 하나가 (특히 성 관련 문제에서) ‘혐의만으로 유죄’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간단히 무시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심지어 배척까지 해 운동의 연대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윤미향 의원의 정치적 약점을 비판하는 것이 징계를 받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고, 반대로 징계를 반대하면 윤 의원을 정치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국회의원 제명 시도에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위안부 운동을 효과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정치적 교훈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인식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 위기·팬데믹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기후 위기 같은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 위기, 팬데믹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

고 한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 (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되어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합시다.

※ 2021년 2월 27일 개정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workerssolidarity.org/join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워크페이퍼)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online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팬데믹, 기후 위기, 차별과 해방, 좌파의 대안 논의 등 주제별 영상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읽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시사/이슈 토크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공수처 통진조치 논란,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불평등, N번방 방지법 ...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하는 [주말 pick] /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2021년 3월 쿼드(Quad) 정상회의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한국노동신문



바이든 정부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대중국’) 보고서 트럼프처럼 강경하게, 트럼프와 달리 동맹과 함께

김영익

2월 11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같은 보고서를 낸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행동 계획을 밝힌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밝혔듯이, 오늘날 인도-태평양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7개국이 있는 곳이다. 특히, 미국의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거세다.

그만큼 인도-태평양에는 미국의 중요한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이 지역을 중시했다. 그러나 집권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는 등 중국 견제에

필요한 동맹을 구축·강화하는 데서 일관되고 정교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바이든 정부는 동맹 체계를 중시해, 영국·호주와 새로운 군사동맹인 오키우스(AUKUS)를 결성하는 등 동맹을 재조정해 왔다.

동맹 중시 기조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반영돼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의 “유일한 비대칭적 강점”이라면서 말이다.

보고서는 미국·인도·일본·호주의 협의체인 쿼드(Quad)를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안보 쟁점은 물론 “지역 개발, 인프라, 중요한 기술과 공급망 문제”에서도 3자 협력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서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유력한 협력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국에 대해,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확립, 공급망, 인프라 문제 등도 다뤄 기존 무역 협정보다 훨씬 포괄적인 경제 협력 틀이 될 듯하다.

반도체·5G·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TPP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실현해, 인도-태평양 경제를 중국이 아니라 미국 중심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것이다.

요컨대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추진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미국의 강점이자 패권의 중요한 원천을 동맹이라

고 보고 이를 강화하려고 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배치를 확대하는 등 군사력을 늘리겠다고 했고, 대만을 비롯한 우방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해 “더 탄력 있는 병력 배치 태세를 개발”하겠다고도 했다.

탄력 있는 병력 배치가 언급된 것을 보면, 대만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예컨대 한미 양국은 앞서 한미동맹의 작전 계획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주한미군의 유사시 대만 지원 계획이 주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한국의 새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대만 문제 협력 강화 등 여러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미·중 갈등이 악화되면서 한국이 받는 압력도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외치는 윤석열, 그러나 이재명도 신뢰 못 해

미·중 갈등은 지금 대선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민의힘 윤석열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약속하며 이를 대선 쟁점으로 삼았다. 그는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을 비롯한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이고, 한미 동맹에 소홀했다고 비난한다.

대통령 문재인이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대만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었다는 점 등을 생각하면 우파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쿼드 가입, 한일 관계 개선 등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더 확실히 협력하기를 원한다. 이게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방향을 가리킨다. 미·중 갈등은 계속 악화돼 왔고,

머지않은 미래에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두 제국주의 국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런 가운데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동맹을 강화한다면, 미·중 갈등의 위험에 더 깊이 연루될 것이다. 그에 따른 부담은 한국의 대중이 떠안을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은 균형 외교를 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주에 배치된 사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드

러나듯이, 그도 한미동맹이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재명 캠프에는 이종석 같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가 많이 포진돼 있다. 이종석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서 이라크 파병을 책임진 자였다. 한미 FTA 협상 책임자였고 문재인인의 청와대에서도 일한 김현종도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 있다. 이재명도 제국주의 문제에서 믿을 바 못 된다.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약속을 어긴 사용자를 편드는 정부

신정환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2월 22일 현재) 57일을 넘어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커져 가는 생계 부담 속에서도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투쟁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가 있다. CJ대한통운 사측은 과로사 방지 합의를 뒤엎고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부속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

노조의 대화 촉구에 사측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은 택배 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과 임금(수수료)을 좌지우지하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측 편들기만 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 합의의 한 주체였던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친사용자 언론들은 일부 비조합원들의 파업 비난을 부각하며 정당성을 깎아내리려 한다. 그러나 이런 이간질은 사태의 본질을 흐려 사측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합의 이행, 부속합의서 폐기는 조합원·비조합원 가릴 것 없이 택배 노동자들 모두에게 이롭다.

다른 택배사 노동자들도 CJ대한통운 파업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2월 21일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는 우체국·롯데·한진·로젠 택배 노동자들도 참여해 1500여 명이 모였다.

하루 파업을 하고 참가한 한 롯데택배 노동자는 말했다. "CJ대한통운에서 [당일 배송, 주 6일제,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가 관철되면 롯데, 한진 등 줄줄이 부속합의서가 도입돼 일요일까지 나와서 일해야 할 겁니다."

이날 집회 직후 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부분(3층) 해제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단식에 돌입했다. "(사측에)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3층 점거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농성 해제 결정을 아쉬워하면서도 지도부의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본사 점거는 1층(약 50명)만 유지되고 있다.



김민아 기자

필요한 것은 중재가 아닌 연대 투쟁! 2월 2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

노사 양측에 양보 촉구하는 중재 시도 경계해야

점거 농성 부분 해제는 90여 개 종교·시민사회단체·정당 등이 모인 CJ택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회적 합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의 장을 열어 내야 한다"고 노·사·정에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사측과 정부에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에도 "대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작은 행동"을 보여 달라고 제안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고육지책"이라며 노조에 한발 물러서기를 호소했다.

이와 맞물려 노동운동 안팎에서 노사 양측에 양보와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점거 농성을 부분 해

제하자, 사측은 되레 1층 점거도 해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진경호 위원장 등 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을 죽음과 과로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노동자들에게 투쟁 수위를 낮추고 양보하라고 제안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연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투쟁을 지원해야 한다.

그 점에서, 택배 파업이 장기화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의 연대 부족 문제가 크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연대를 구축하고 확대할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있다.

대선 시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의 소극적 행보도 매우 아쉽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택배 투쟁에 연대해 왔지만, 기층 당원들을 동원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업 노동자들의 심정도 복잡한 듯하다.

그럼에도 노동자들은 투지를 꺾지 않고 있다. 2월 22일에는 파업 노동자 120여 명이 CJ대한통운의 핵심 터미널인 곤지암메가허브 앞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출차를 방해하는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투쟁에 확고히 무게 중심을 뒀야 한다. 어떤 맥락과 방향 속에서 대화가 열리느냐에 따라 성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운동 조직의 연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

3월 3일(목) 오후 8시 발제 최미진 <노동자연대> 기자, <누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오늘날 여성의 처지는 양극단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여성 차별을 단지 옛일로 치부하고, 다른 한편에선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수십 년간 여성의 삶과 지위는 얼마나 어떻게 변화했고, 여성 차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여성의 처지는 계급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런 변화가 여성 해방 운동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참가신청 bit.ly/0303-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